

ASAN REPORT

한국 외교안보의 8대 과제 박근혜 정부 2년의 성취와 숙제

아산정책연구원

2015년 5월



Asan Report

한국 외교안보의 8대 과제
박근혜 정부 2년의 성취와 숙제

아산정책연구원 | 2015년 5월

아산정책연구원은 집권 3년 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정책 제안서를 마련했다. 지난 2년 간의 정책을 분석,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은 집권기간에 해결해야 할 대외정책 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제안서는 아산정책연구원과 동아일보가 공동 기획, 2015년 4월 2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크게 확대 보완한 것이다.

목차

1.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정책 3대 비판	04
2. 8대 정책제언	06
1) 한미동맹을 적극 활용할 것	06
2) '강한 군대'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것	08
3)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것	09
4) 남북정상회담에 매달리지 말 것	11
5) 북한 사회와 주민을 변화시킬 능동적 정책을 펼칠 것	12
6) 한일 관계의 출구를 찾도록 노력할 것	13
7)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문제를 해결하고 대국민 소통을 개선할 것	15
8) 외교안보의 지평을 다시 넓힐 것	15
3. 한국인의 외교안보 이슈 인식 조사	18
1) 남북 관계 개선에 실질적 성과 있어야	20
2) 한일 관계 개선: 과거사 문제 해결 위해 관계 풀어야	26
3)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는	29

1.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정책 3대 비판

박근혜 정부 2년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억울해 할 수 있다. 한 일 관계를 제외하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과 같은 대형 안보사태가 벌어지지도 않았고, 원칙 없는 퍼주기식 대북 정책을 펴지도 않았다. 오히려 한미, 한중 정상외교를 비롯해 중동·유럽 국가를 상대로 한 외교도 활발했다.

경제협력분야에서는 베트남, 캐나다, 호주, 중국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추진 중이고 유럽과 중동 국가와의 경제협력과 투자 기회도 확대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은 우리 외교안보의 핵심 사안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안보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엔 진척이 없고 북한의 핵 능력은 오히려 강화됐다. 최악의 한일 관계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전략성 모호성'만 말하는 정부의 모습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정부는 활발한 대미, 대중 정상외교를 통해 단기적으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미일, 미중, 중일 관계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큰 흐름을 신속히 포착하고 전략적 함의를 읽어내 정책에 반영하는 데 미흡했다. 일본이 발 빠른 외교로 미일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집단적 자위권이란 성과를 챙겨가는 반면 한국은 역사 문제에 매몰돼 한일 관계가 질곡에 빠지고, 그 결과 안보 협력 부문을 외면해 미국과의 관계도 꼬이게 만든다는 인상을 남겼다.

중국을 너무 의식하고 그에 쫓린 나머지 초강대국으로 재부상하는 미국의 변화를 신속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로 인해 미국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데 한계를 보인 것을 넘어 동맹의 긴장마저 야기되고 있다.

둘째, 비전을 정책과 행동으로 현실화하는 능력이 미흡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구상, 통일대박론 등을 발표했지

만 추상적 구호에 머물며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대로 옮기지 못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경우 당사자인 북한의 호응은 아직도 요원하다. 북한은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4차 핵실험 위협 등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조건을 내세우며 남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추진하려면 한일, 중일 관계가 개선돼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요원하고, 중일 관계 역시 냉랭한 상태다.

이 구상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미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야 했고 그럴 수 없다면 구상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뤄 놓거나 대폭적으로 수정해야 했다. 유라시아구상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야기된 서방국가들과 러시아의 대립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실현되기 어렵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비전을 구현하는 정책의 유연성이 부족하다. 구체성 없는 외교안보 비전에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게 된다.

'통일대박론'도 비전이 아닌 정책은 아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기, 중기, 장기 정책이 필요하다. 비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너무 이상적이고 고차원적이며 구체적인 행동 계획(action plans)을 제시하지 못한 채 레토릭과 구호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온 점이 문제다.

박근혜 정부의 비전 가운데는(유라시아구상과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노태우 정부 이후 25년 동안 이미 제시됐고 논의된 내용도 많다. 새로운 비전을 내놓기 전에 유사한 과거의 비전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실패와 성공에서 교훈을 얻어내는 과정이 필요했다.

또 비전의 장기적 실현 기반을 검토한 후, 집권 5년 내 어떤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행동계획을 세웠어야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제시된 비전마다 관련 이슈들이 있다. 이슈들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일 수 있지만 모순되거나 충돌되기도 한다. 이럴 때 어떤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을 추진할지를 정해야 하는데, 정책 목표를 유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이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부족해 보인다.

셋째,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는다. 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정책 사안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통로가 불확실하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대통령과 참모 간에 소통이 잘 안되고 권한 위임도 불분명해 대통령의 뜻을 책임 있게 대변하거나, 정부의 정책을 자신 있게 설명하기 어려웠다. 대통령이 모두 결정하거나 대통령의 뜻만 기다리는 현상이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책임 있는 당국자가 대통령과 중요한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토론하고 교감할 수 있어야 대통령의 심증을 읽고 국민에게 정책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로 이원화 된 청와대의 외교안보 시스템도 의사결정과 정책조율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국민과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2. 8대 정책제언

박근혜 정부가 남은 3년 임기 동안 취해야 할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한미동맹을 적극 활용할 것

한국에게 한미동맹은 최대의 전략적 자산이다. 이를 강화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 중국이 부상하고 일본의 보수 우경화가 가속화하는 최근 정세 하에 그 필요성은 더 커져 가고 있다.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문제로 한국을 압박하며 한미동맹의 약화를 노리고, 일본은 역사 문제로 한미동맹에 상처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을 신속히 해소하고 동북아의 새로운 정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더 공고히 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한국의 입지는 좁아지고 약해진다. 미국과 멀어진 한국은 중국 입

장에서 전략적 가치가 떨어진다. 중국의 압력은 거세지고 한국은 버티기 힘들어진다. 그렇다고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하며 중국에 편승해서도 안 된다.

반대로 강한 한미동맹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 주변국 외교에 도움이 된다.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일본과의 현안 해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중국의 압박에도 ‘강한 헤징(hedging)’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동맹을 강화하면 ‘중국에 경도된다’는 미국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원하는 중국이 오히려 한국에 더 많은 러브콜을 보내게 만드는 환경도 조성된다. 호주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의 재균형 정책에 호응하고 나오는 이유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려면 한국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한미간에는 ‘폭넓은’ 전략 논의 틀이 없다. 전략 논의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이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동맹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에 중국이 반발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일 안보 협력의 대상을 지역 안보로 하기보다 국제사회의 안보 공공재(global commons)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하고 협력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한다면 중국의 반발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행동에 앞서 통합적 외교안보협의 채널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일본·중국이 3국 협력사무국을 통해 1.5 트랙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미일이 유사한 체제를 구축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슈별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동맹 구조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한다. 우선적인 이슈로 미사일 방어 체제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강화를 꼽을 수 있다. 사이버 테러에 대응한 정보·통신·기술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안보뿐 아니라 경제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한미 FTA를 적극 시행해 미국과 인적 교류를 늘리는 방안이 있다. 미국에서 이민 개혁은 해마다 선거 이슈로 떠오른다. 두 나라가 이민과 인적 교류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FTA로 두 나라가 가까워진 만큼 시장 리스크를 막기 위해 양국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사이에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데이터 교환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안보체제에 대한 참여와 기여도 늘려야 한다. 해외 개발지원, 기후변화와 환경뿐 아니라 핵 안보, 에너지 등과 같은 비전통 안보분야의 협력도 한미동맹에 기여할 수 있다.

2) '강한 군대'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것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이 강화되면서 안보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날짜를 미리 정하지 않고 조건¹이 달성됐는지를 평가해 전환 여부를 결정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 그러나 연기 결정으로 인해 우리의 안보를 미국에만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자주 국방 태세가 약화되는 사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전작권 전환 연기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답은 아니다. 우리의 군사력 증강이라는 숙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이를 위한 시간을 더 벌었을 뿐이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를 목표로 핵심 국방 전략 방향과 구체적 계획을 담은 포괄적 국방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기본 방향을 북한의 비대칭 위협, 국지도발, 전면전을 동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단·중·장기 과제는 기본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응하는 전력과 체제 구축'이 가장 화급하고 중요한 사안임에도 대부분 장기 과제로 돼 있다. 당장 시행에 들어가거나 곧 시행할 단·중기 과제는 합참 개편, 동원사단 개편, 민·군작전 부대 편성, 동원체제 개선, 물류 개선, 복지 향상, 군 구

1.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은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안정적이고 △한국군이 핵심 능력을 갖춰야 하며 △유사시 초기 단계에서 한국군의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공격에 대한 필수 대응 능력 확보 등이다.

조 개편 같은 '덜 시급한' 국방운영에 관한 것들이다. 우리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방향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군 구조 개혁도 필요하지만 핵심 군사력(무기 체계) 확보가 더 시급하다.

현실성 있는 국방개혁을 구상하고 과제간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강한 군대'를 육성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 1988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 국방 예산 평균은 GDP의 2.9% 수준인데 미국, 이스라엘은 각각 4%, 9%에 달한다.²

3)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것

북한 핵은 가장 위중한 안보 위협이다.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가 2015년 2월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5년 내에 최소 20여 개에서 최대 100개의 핵 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측된다.³

이에 앞서 2014년 초 미 전략사령부의 세실 헤이니(Cecil Haney) 제독은 미 상원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이미 핵탄두의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증언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체 부분에서 당장 의미 있는 성과를 얻지 못해도 이미 우리를 위협하기에 충분한 핵 수단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각에선 북한이 같은 민족인 남한에 핵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의 고각발사시험은 북한이 핵을 남쪽을 겨냥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우방국을 공격하는데 쓸 수 있다. 북한의 핵 능력이 완성되는 순간 우리의 안보는 무너지는 것이며 이미 무너져 가고 있다.

2.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http://www.sipri.org/research/armaments/milex/milex_database.

3. 뉴시스, '존스홉킨스 "北, 2020년까지 핵무기 최대 100개 보유"', 2015년 2월 25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6371646>.

북한 비핵화는 가장 중요한 안보 현안이지만 대화와 협상이라는 ‘외교적 접근’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를 파악하거나 확인하는데 집중하는 것 또한 의미가 없다. 이미 북한은 핵 무기를 제거하는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핵 보유국이라 주장하는 북한이 핵 포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협상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비핵화 대책은 북한의 객관적 능력을 겨냥해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 핵무장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병진 정책’을 고집할수록 비용과 고통이 가중되도록 강력한 압박 정책, 즉 ‘반(反)병진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金正은이 핵과 정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만큼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반병진 전략’의 궁극적 목적은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필요한 것은 핵이 아니라 경제 개발’이라는 점과 병진 정책을 계속하면 결국은 사용할 수 없는 핵무기와 침몰하는 경제만 남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데 있다.

‘반(反)병진 전략’의 골자는 핵은 핵 무력화로, 경제는 전반적 대북 경제 봉쇄로 대응하는 것이다. 핵 무력화를 위해 미사일 방어 체제와 킬체인(Kill Chain)의 조기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은 상호보완적이다. 미사일 방어망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방어한다. 킬체인은 북한이 선제 공격 조짐을 보이면 이를 무력화하고, 그래도 공격하면 북한의 전략공격체제를 총체적으로 무력화하는 체제다.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지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조치해야 한다. 미국의 애슈턴 카터(Ashton Carter) 신임 국방장관은 주한 미군에 F-22, B-52 같은 첨단 전력을 증강시킬 것이라고⁴ 밝혔는데 전력 강화 조치가 더 확대되도록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4월 16일 한미 양국이 한미억제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이 확장 억제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을 제

4. 중앙일보, ‘한국땅 밟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첫마디가...’, 2015년 4월 9일.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555374&cloc=olink|article|default 카터 장관은 “미국은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 스텔스 폭격기, 새로운 함정들을 만들고 있으며, 이 지역(아시아·태평양)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한다고 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돼왔던 만큼 위원회에서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구체적 전략을 함께 모색하고 논의하는 과정은 아주 중요하다.

북한 병진 정책의 다른 한 축인 경제 건설에 대한 제재의 강도도 늘려야 한다. 북한 정권에게 경제 발전은 해묵은 숙제이자 정권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북한 경제가 최근 몇 년간 나아지고 식량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는 거리가 멀다.

경제 성장을 통해 북한 정권이 유지되려면 북한의 사회 인프라 재건과 대규모 해외 자본의 유입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투자가 전무한 상태에서 북한 정권은 우선 현상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결국 경제적 출구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이럴 경우 비핵화를 경제 교류와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전략을 써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5.24 조치 중 경제 관련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교역 중단,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조치가 유지돼야 경제적 어려움을 탈출하기 위해金正은이 비핵화 행보를 고려할 수 있다. 이란의 최근 핵 협상은 강력한 경제 제재가 야기한 경제난 해소를 위해 비핵화로 방향을 전환한 좋은 사례다.

중국은 경제 압박의 중요한 한 축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중국에게 북한이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근원임을 확인시켰다. 그 결과 북중 무역은 2013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고 북한이 중국에 요구한 황금평-나선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 계획 또한 거의 백지화된 상태다. 우리는 중국에게 현 수준을 넘어 경제 압박을 더 강화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기타 주변국가와 국제사회에도 북한 비핵화 이전까지 대북투자를 자제할 것을 주문해야 한다.

다만 북한이 핵 포기의 전향적 자세를 보이면 즉각 대대적인 경제 원조와 투자로 화답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북한 정권에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4) 남북정상회담에 매달리지 말 것

북한과의 대화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관계를 진전시켜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

다'는 강박 관념에 잡혀 있는 듯하다. 집착할수록 대화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우리의 협상 입지가 악화돼 오히려 대화의 목적이 훼손된다.

대화가 남북 관계를 자동적으로 진전시킨다고 여기는 것은 착각이다. 무조건적인 대화는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상황을 오판하게 만들 수 있다. 북한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 대화에 응하도록 여건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지난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주고 부담을 안겼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는 정상회담, 만난 뒤 부담만 남길 정상회담은 필요 없다.

남북 대화를 복원할 필요는 있지만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되, 조급하고 불안해 하지 말아야 한다. 조급해하면 북한에게만 유리하다. 남북 관계를 주도하려면 당당하고 의연해야 하며 여유를 가져야 한다. 대화의 목표를 세우고 합의가 이행되도록 하는 방안부터 먼저 강구해야 한다.

5) 북한 사회와 주민을 변화시킬 능동적 정책을 펼칠 것

북한 주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햇볕정책은 북한 주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데 기여하지 못했다. 지원의 수혜자가 주민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보건 지원 확대는 5.24 조치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건 지원은 북한 정권이 전용하기 어려워 효율성이 높은 인도적 지원이다.

드레스덴 선언은 모자 보건(mother and child health)에 초점을 맞췄는데 대상을 영·유아, 여성, 노약자 같은 취약 계층으로 확대해 대대적이며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특히 백신 지원은 적은 투자로 통일 주역이 될 북한의 차세대 건강을 보장해준다는 점

에서 핵심이 돼야 한다. 백신은 취급도 어렵고 치료제도 아니어서 밀거래 대상도 아니다. 일인당 투여량도 일정해 남용되지 않는다. 북한 권력층이 백신을 우선 사용한다 해도 백신의 집단면역(herd immunity) 효과 때문에 면역력이 취약계층으로 확산되므로 결국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

5.24 대북 제재 이후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 백신을 지원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북한 정권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백신 수요를 100% 책임지겠다”고 공개 제안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도록 압박해야 한다. 북한이 거부하면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적 성격을 국제사회가 거듭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결핵 치료를 위한 지원도 절실하다. WHO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매년 10만 여 명의 결핵 환자가 발생한다. 이 중 3,000~4,000명은 치료가 힘든 다내제성 결핵 환자로 추산된다. 한국도 OECD 국가들 중에서 결핵 유병률이 가장 높아 취약하다.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 북한뿐 아니라 우리의 결핵 문제도 심각해 질 수 있다. 북한의 결핵 문제 해결을 미리 지원하면 우리의 공중 보건을 지키고 통일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산가족 상봉과 국군 포로 송환에 호응하는 대가로 이산가족의 직계 북한 주민에게는 식량을, 당국에는 비료를 지원하는 안을 북한에 제안해 볼 수 있다. 이런 지원들은 북한 주민과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세적인 정책이기도 하다.

6) 한일 관계의 출구를 찾도록 노력할 것

과거사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대일 외교는 일본의 반성을 이끌어 내고 한일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실패했다. 이제 악화된 한일 관계의 출구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아베 정권의 퇴행적 과거사 인식과 우경화는 꾸준히 비판해야 하지만 이와 병행해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일본의 역사 반성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진정한 사과를 위해 일본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양국이 주고 받을 점을 명확히 해 해결로 이끌어 가야 한다.

‘북한 핵 위협 대응’ 하나만을 위해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위안부 문제

가 당장 한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된다 해도' 독도, 동해 표기, 역사 교과서, 무역 역조, 재일 한국인 지방 참정권 문제, 안보 협력 등 참여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는다. 한일 양국간엔 이처럼 논의와 협력을 기다리는 현안이 많다.

그런데 정부는 아베의 움직임 지켜본다는 외교 노선을 견지한다. 이런 노선은 자칫 한일 관계의 주도권을 아베에 넘기게 된다. 현안 해결도 계속 미뤄진다. 한중일 협력도 방치해 한국 주도로 성사된 3국 외교장관 회의의 모멘텀도 유지하지 못한다. 정부는 '기다리는 대일 외교'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

대일 외교와 한미 관계의 연계성을 고려하는지도 의문이다. 아베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꾸준히 미국 일변도의 외교를 펼쳤다. 집단자위권 재해석, 무기수출 원칙 개정,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을 통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성공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인정되고 이를 반영하는 미일 안보 가이드라인이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의 새 현실로 자리잡았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과 행동을 거듭하면서도 미국엔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처신을 한다. 미국은 아베 정권의 역사관을 비판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 문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한다. 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면서 미국에선 '한국 정부는 역사와 안보협력을 연계해 한미일 삼국 안보공조에 소극적'이란 목소리가 높아 간다. 아시아에서 미국이 의지할 수 있는 동맹은 일본뿐이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저울질한다는 소위 '한국의 중국 경사론'도 퍼져 있다.

일본의 대미 외교가 한미동맹에 상처를 내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악화된 한일 관계의 출구를 찾는 외교가 필요하다.

과거사를 제외한 분야의 협력과 관련, 정부는 우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원칙과 미일 상호 방위협력지침개정에 대해 일본의 설명을 듣고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고위급 양자 안보회담을 추진해야 한다. 자위대의 활동범위와 역할 변화는 한국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회담 의제를 과거사 문제가 아닌 군사안보 이슈로 국한하면 한국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집착해 한미일 삼국 안보공조에 적극 협력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불식시킨다. 중국에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역사 문제와 양국 공조 문제를 결정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7)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문제를 해결하고 대국민 소통을 개선할 것

정책은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있어야 제대로 수행된다. 남북 및 외교안보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대외 정책을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믿고 지지해 달라'는 메시지만 반복해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감은 증폭된다.

정부는 정책 설명이나 홍보에 앞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비판을 흘려 듣지 말고 왜 비판이 제기되는지 돌아봐야 한다. 화려하지만 내용이 불분명하고 선언적인 구호에 집착하지 말고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며, 무슨 조치와 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야 한다.

청와대 내부의 컨트롤 타워를 일원화하고 협업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안보실(5개 비서관: 정책조정, 안보전략, 위기관리, 정보상황, 사이버안보)과 비서실(3개 비서관: 통일, 외교, 국방)간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 벽을 허물고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위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기존 조직 체계는 유지하되 이슈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방안이다.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관련 기관과 인원들간에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

안보실의 기획·조정·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는 집행에 집중해야 한다. 안보실이 대통령과 부처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안보실장은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해 단순한 비서가 아닌 전략형 참모가 돼야 한다.

8) 외교안보의 지평을 다시 넓힐 것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대상과 의제는 꾸준히 확대돼 왔다. 6.25 전쟁 직후 외교안보 정

책은 미국과의 동맹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목표로 출발했다. 이후 반 세기를 훌쩍 지난 지금 외교의 대상은 한반도 주변을 넘어 동남아와 유럽, 그리고 양 자외교를 넘어 다자외교로 넓어졌다.

의제도 정치·군사적 목표와 관련된 경성권력(hard power) 의제에서 무역·금융·인 권·환경·기후변화 같은 범지구적 이슈이자 연성권력(soft power) 의제로 넓어져 갔다.

그러나 최근 우리 외교안보의 지평이 축소되고 있다. 뚜렷하고 일관된 정책 없이 최고 지도자의 선언에만 머물러있기 때문이다. 집권 초기에 발표되었던 환경, 재난 관리, 원자 력 안전, 사이버 스페이스, 보건 같은 비전통적 안보 분야의 협력을 위한 동북아평화협력 구상(동평구)이나,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에 이르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모두 웅장한 비전에 비해 현실성이 부족하고 손에 잡히는 내용이 없다.

동평구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을 위해 우회 전략도 구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평구의 경우 협력 주체인 동북아 6개국의 다자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하는 몽골이나 러시아와의 양자관계를 보다 견고히 하는 방법이 있다. 또 우리의 외교적 자산을 적극 활용하면 비전통 안보 영역에 대한 정책도 충분히 준비하고 추진 할 수 있다.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중견국 외교도 강화해야 한다. 신(新)기후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다시 한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분야'에서 선도적 중견국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 MIKTA⁵ 협력을 발전시켜 G20 체제 내 우리의 정치력도 향상시켜야 한다.

중견국 외교를 위해서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제 규범을 준수하며 인 도주의 같은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이런 주제들은 주목을 끌지 못하고 단기적 성과가 나지 않으며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아⁶ 국가가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5. MIKTA는 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ilia의 앞머리를 딴 조합으로 2013년 9월 25 일 68차 유엔 총회에 참석한 핵심 5개 중견국 외교장관 모임을 계기로 출발한 협력 메커니즘이다.

6. 국제적 공여금 등을 늘려야 하는데 이는 국가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견국 외교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기 위해 당연히 추구해 야 한다. 한반도 현안과 관련한 장기적 국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우리가 국제적 핵심 이슈에 대해 명확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면 한반도 의제 도 세계 여론의 지지와 윤리적 권위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국제적 이슈 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정책적 판단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 제안서 논의에 참석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진

함재봉 원장, 천영우 고문(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외교안보센터=최강 부원 장, 봉영식 선임연구위원, 이성원 연구원 △글로벌거버넌스센터=신창훈·박지영·최현정 연구위원 △지역연구센터=김한권·장지향·제임스 김 연구위원 △여론계량분석센터=고명현 연구위원 △편집실=안성규 편집전문위원

3. 한국인의 외교안보 이슈 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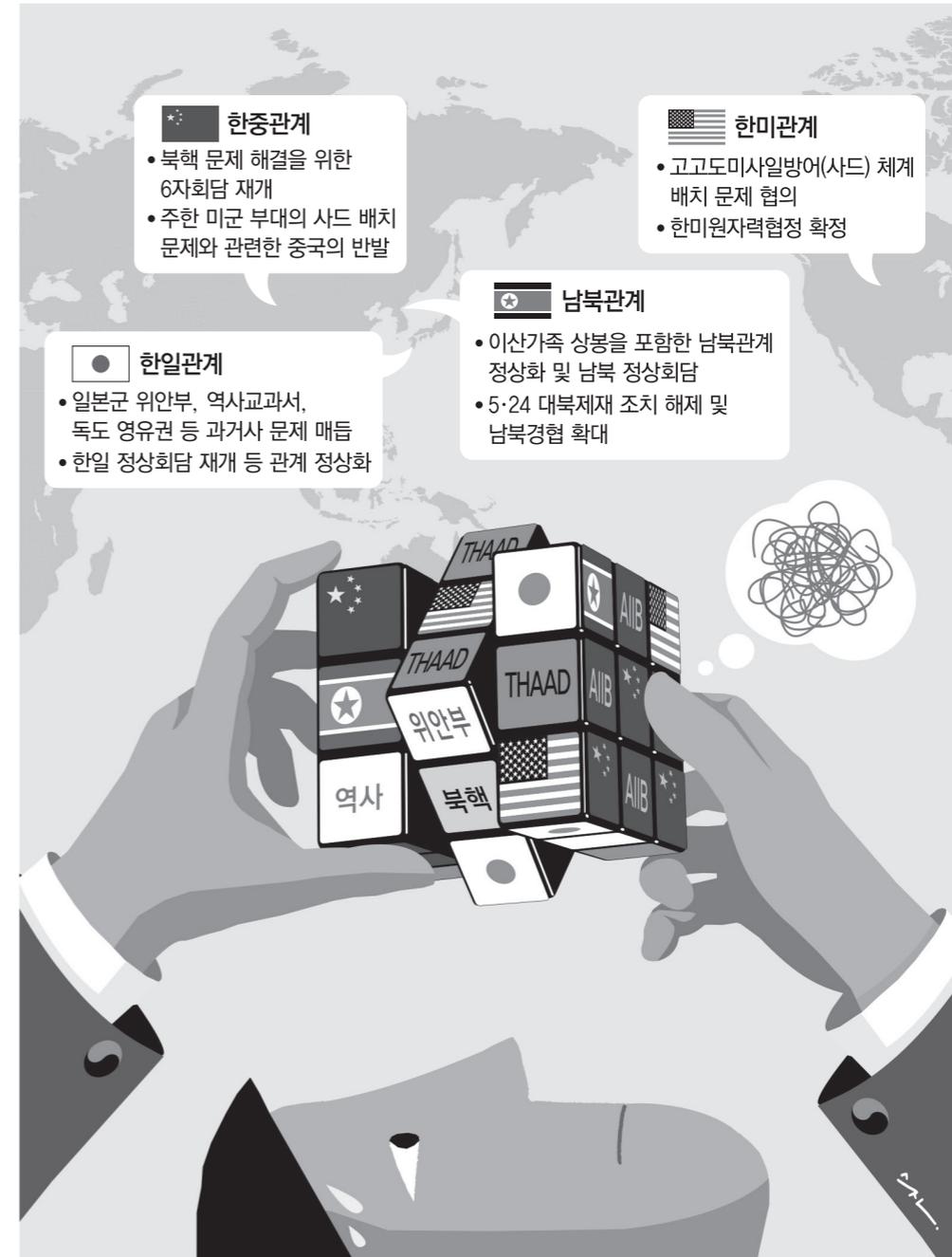
집권 3년 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최근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부는 나라를 들끓게 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기조로 한 정부의 대책은 국민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그런 가운데 3월 30일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이 재외공관장회 개회사에서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은 결코 골칫거리나 딜레마가 아니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⁷고 했는데 이 말이 또 국민 감정을 건드렸다. 여론이 다소 가라앉는 듯하자 이번엔 북한이 4월 3일 단거리 미사일 4발을 발사해 미사일·핵 긴장이 고조될 조짐이 나타났다. 이어 일본발 역사 왜곡이 뒤따랐다. 4월 6일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한 중학교 사회 교과서들이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증을 모두 통과했다. 7일에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2015 외교청서'가 공개됐다.

이슈와 현안이 연이어 박근혜 정부를 강타한다. 한국 외교는 비틀거린다. 국민은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아산정책연구원은 한국인의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3.1% 포인트
- 조사방법: 유·무선 RDD 전화면접
- 조사기간: 2015년 3월 18~20일
-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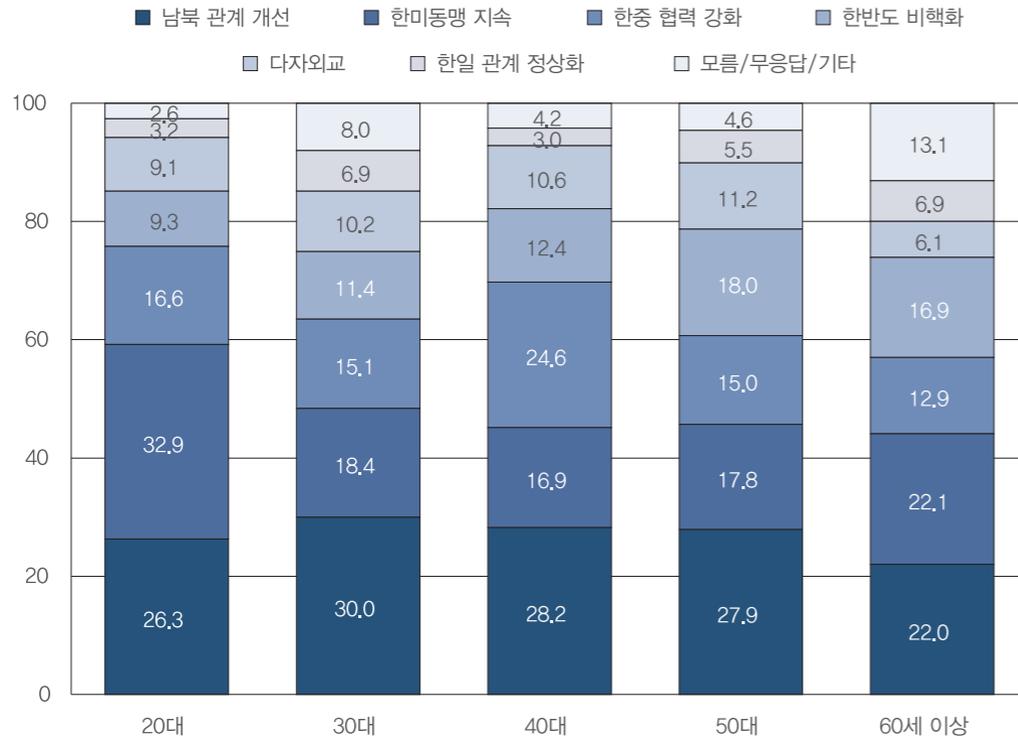
7. 중앙일보, '윤병세 "미중 러브콜, 딜레마 아닌 축복" 작심발언 논란', 2015년 3월 30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460047>.

[그림 1] 남북 관계 및 외교안보 정책 주요 현안



자료: 동아일보.

[그림 2] 한국 대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인가 (단위: %)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는 △남북 관계 개선(26.8%) △한미동맹 지속(21.4%) △한중 협력 강화(16.9%) △한반도 비핵화(13.8%) △다자외교(9.4%)와 △한일 관계 정상화(5.1%) 순이다. 남북 관계 개선, 한미동맹 지속, 한반도 비핵화를 ‘넓은 의미의 북한 문제’로 보면 이와 관련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답은 62%나 된다. 경색된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는 커도 이 문제를 중시하는 여론이 낮다는 점은 특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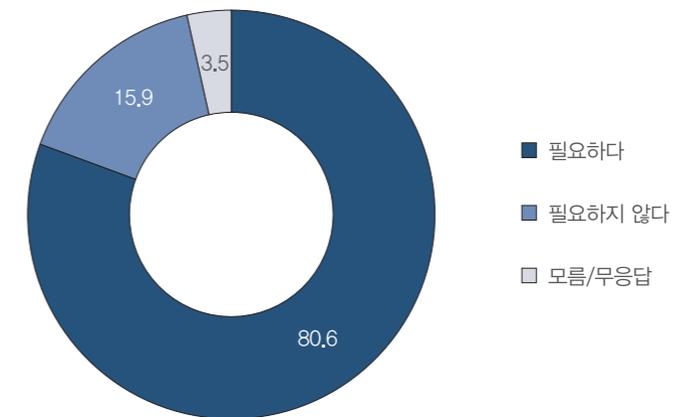
1) 남북 관계 개선에 실질적 성과 있어야

남북 관계 개선은 30대 30%, 40대 28.2%, 50대 27.9%가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현안’으로 꼽았다. 20대가 한미동맹 지속을 남북 관계 개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은 눈길을 끈다(20대: 남북 관계 개선 26.3%, 한미동맹 지속 32.9%).

전체 응답자의 다수인 26.8%가 남북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답한 점은 국민들이 ‘신뢰’와 같은 추상적 가치보다 정책을 통한 실질적 성과에 더 목말라함을 보여준다.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해제 등 남북 관계 현안에 대해서는 보수·진보간 의견차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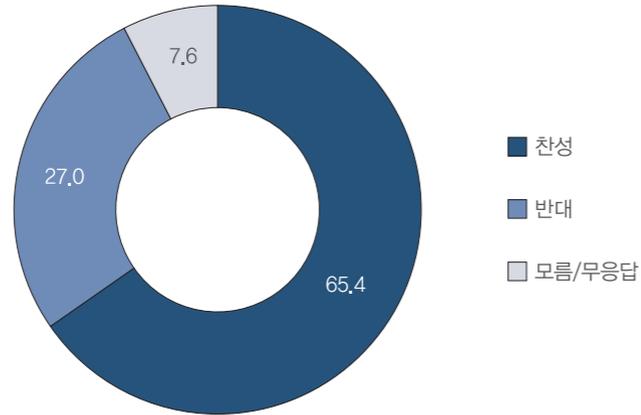
◆“남북정상회담 필요하다”=응답자 가운데 80.6%가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81.7%), 40대(85.8%), 50대(82.2%)의 지지율이 특히 높았고, 30대(78.4%), 60세 이상(75.1%)도 75%를 넘어선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8%)의 지지가 보수층(75.6%)보다 훨씬 높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바라는 목소리는 성별, 지역, 직업, 학력, 소득에 관계없이 높았다. 남북 관계 진전이 없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과 이를 정상회담으로 돌파하라는 주문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 남북정상회담 필요한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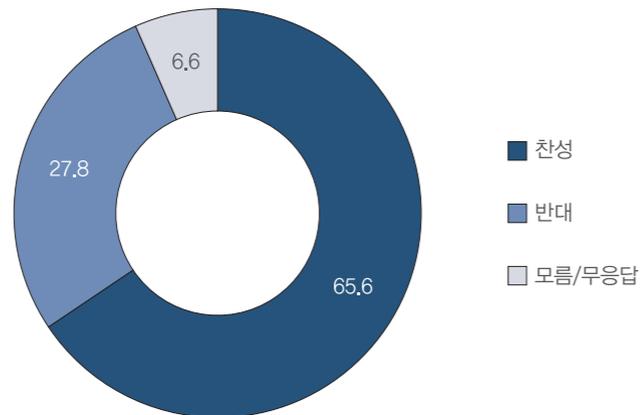
◆금강산 관광 재개=2008년 박왕자씨 피격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라는 요구가 높다. 65.4%가 재개에 찬성했고, 27%가 반대했다. 연령대별로도 20대(63.2%), 30대(65%), 50대(67.8%)가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40대의 지지가 72.4%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은 58.7%로 가장 낮았다. 한편,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의 지지가 77.6%로 높았다(보수층: 55%).

[그림 4]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하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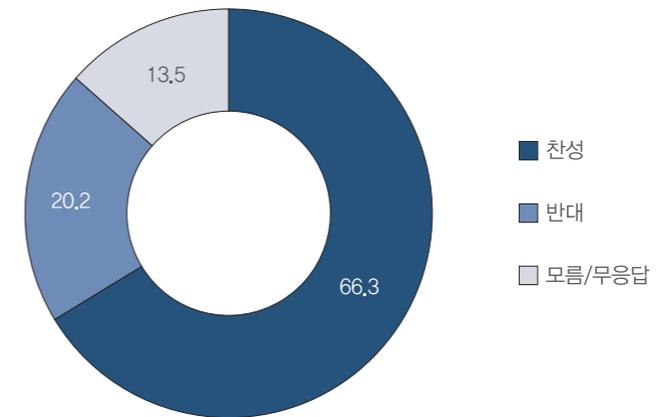
◆이산가족 상봉 기대감 낮아져=이산가족 상봉을 찬성(65.6%)하는 답이 반대(27.8%)보다 많기는 하지만 2014년 10월 본 연구원의 조사 때(찬성 72%, 반대 15.3%)보다 부정적 의견이 늘었다. 2014년 초 설에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지만 북한의 외면으로 무산됐는데 이런 좌절이 반복되면서 국민의 체념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북한이 경제 지원 등의 요구를 해도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해야 하나 (단위: %)



◆대북특사 파견 찬성=‘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특사 파견’에는 찬성(66.3%)이 반대(20.2%)를 압도했다. 경색된 남북 관계에 대한 실망과 개선에 대한 희망이 반영된 것으로 남북정상회담 지지와 맥을 같이 한다. 보수 성향 응답자의 찬성(65.6%)보다 진보 성향의 찬성(76%)이 높다. 연령대별로는 50대(76.8%)의 지지가 가장 높다. 20대는 찬성이 57.3%, 반대가 29.9%로 가장 부정적이었다.

[그림 6]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특사를 파견해야 하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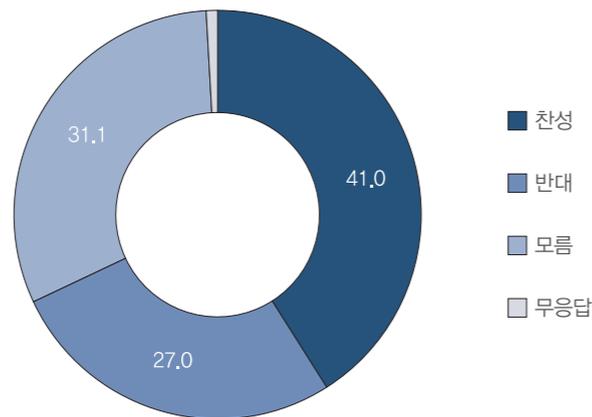
◆5.24 조치 해제해야 하나=3월 26일, 국립 대전 현충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박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5년 전 오늘, 서해 바다 최전방에서 국토수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천안함 용사들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으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북한이 고립과 정체를 버리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때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북한 국방위원회는 3일 뒤인 29일, “천안함 침몰사건과 그에 따른 5.24 조치는 극악무도한 이명박 일당이 조작한 특대형 모략극”이라며 “북남대화에 관심이 있고 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면 화해와 협력의 길을 가로막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5.24 조치와 단호히 결별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했다”고 비판했다. 천안함 사건 뒤 남측이 취한 5.24 조치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보여주는데 이런 갈등은 우리 내부에서도 현재 진행형이다.

5.24 조치=천안함 사건 이후 2010년 5월 24일 취해진 대북제재 조치다.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행 불허, 남북 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취약 계층을 제외한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 5개 사항이 골자다.

'5.24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41%가 찬성했고 27%는 반대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응답자(54.9%)와 보수 응답자(38.1%)의 차이가 16.8% 포인트나 된다. 이 문제로 5년간 좌우 진영 갈등이 뜨거웠던 이유를 보여준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에서 찬성이 50.4%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은 26.7%로 가장 낮았다.

[그림 7]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해야 하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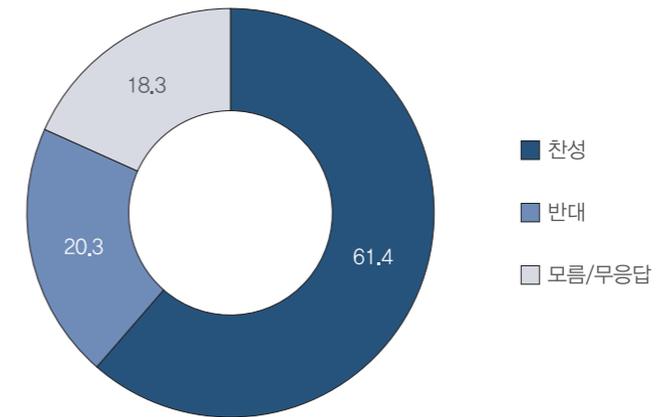


8. 뉴스1, 北, 차대통령 천안함 5주기 추모사 실명비난, 2015년 3월 29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1337889>.

다른 이슈와 달리 이 질문엔 입장을 유보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도 특이하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전체의 31.1%나 됐다. 5.24 조치 자체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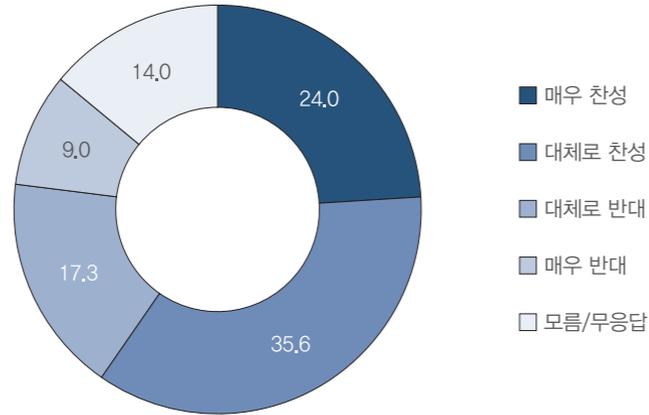
◆사드 배치 문제=사드 배치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의견은 크게 갈렸다. 배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61.4%가 찬성했다. 국민의 대다수는 남북 관계의 진전도 바라지만 무력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제력도 강력하게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보수 응답자(71.9%)는 진보(49.4%)보다 훨씬 더 찬성했다. 사드 문제는 다른 남북 관계 현안 질문 가운데 이념간 차이가 큰 이슈다.

[그림 8] 북한 위협 억제를 위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해야 하나 (단위: %)



◆흡수 통일 찬성=여론의 59.6%는 남한식 체제로 흡수 통일하는 것에 찬성한다. 반대(26.4%)의 두 배 이상이다. '매우 찬성한다'가 24%, '대체로 찬성한다'는 35.6%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64.4%), 40대(63.5%), 50대(63%)가 64% 내외, 30대(53.1%)와 60대 이상(54.4%)이 54% 내외로 찬성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58.9%)보다 보수층(67.1%)에서 지지가 많았다. 2014년 아산정책연구원의 연례조사에서도 한국인이 선호하는 통일 방식으로는 남한식 흡수 통일이 1위(52.1%), 연방제 통일이 2위(46.1%)로 나타났다.

[그림 9] 북한을 남한식 체제로 흡수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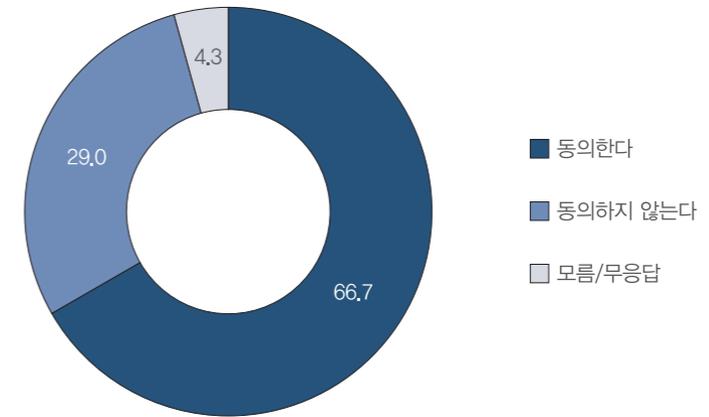
20대의 흡수 통일 찬성 비율이 ‘뜻밖에’ 높는데 대해 아산정책연구원의 봉영식 선임연구원은 “20대는 북한에 대한 환상도 없고 북한이 앞으로 크게 변할 것이라는 기대도 적다”며 “통일이 이뤄진다면 우리의 체제로 북한이 흡수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식을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 한일 관계 개선: 과거사 문제 해결 위해 관계 풀어야

한일 과거사 갈등은 양국 관계뿐 아니라 한미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은 이 점을 걱정한다. 여론조사에서 대다수는 한일 역사 갈등을 풀기 위해서라도 일본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일본이 연일 역사 문제로 도발하고 과거사를 부정하지만 한일 관계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만큼 양국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66.7%나 됐다. ‘관계 개선이 필요 없다’는 응답(29%)을 2배 이상 웃돈다.

◆“한일 관계 개선하라”=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은 연령대·이념성향·학력·지역에 관계없이 고르게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 72.5%, 30대 66.2%, 40대 62.1%, 50대 67.9%, 60세 이상 65.8%였다. 20대의 지지가 유난히 높은 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성장기에 일본 문화를 많이 접했고, 일제강점기의 흉터가 덜해 노년층보다 일본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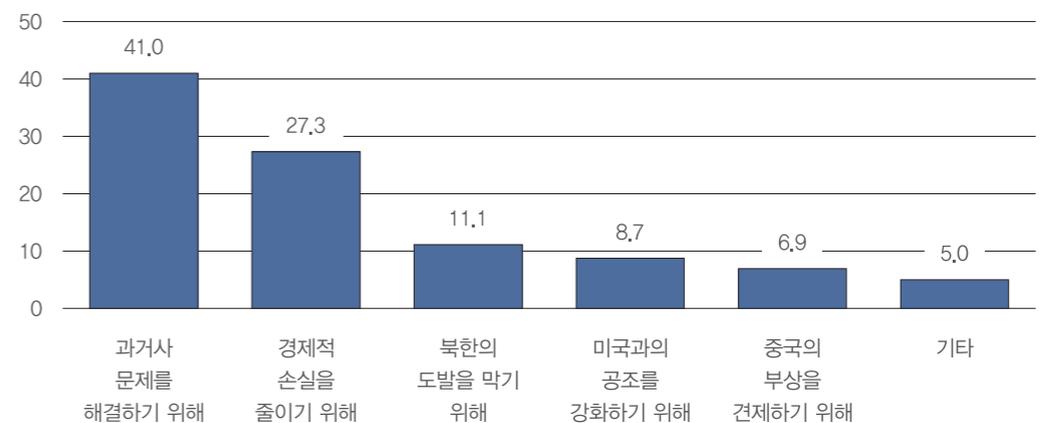
[그림 10] 올해가 한일 수교 50주년인 만큼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나 (단위: %)



◆관계 개선 목적=관심을 끄는 점은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전체의 41%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이유로 꼽았다.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꼽은 것은 국민이 한일 관계 개선을 안보 문제와 연결 짓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27.3%)’, ‘북한의 도발을 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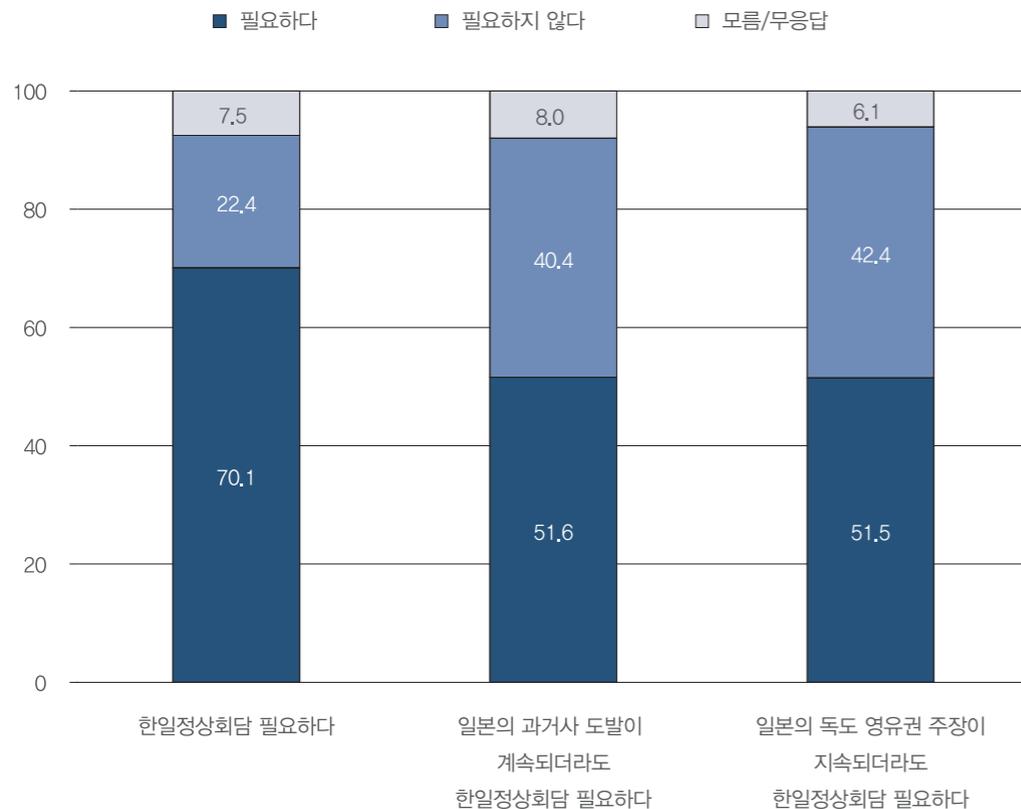
[그림 11]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위: %)



위해(11.1%)’,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8.7%)’,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6.9%)’를 꼽은 비율이 낮는데 역사 문제를 경제·안보 현안보다 중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역사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 군사 협력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여론은 역사 왜곡과 관련된 대일 외교를 대미·대중 관계나 다른 현안과 연계하지 말고 집중할 것을 주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한일정상회담도 열라**=한일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한 지지(70.1%)도 반대(22.4%)를 세 배나 압도한다. 지난해 2월 아산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비해 찬성(54.9%)이 15% 포인트 가량 높아졌고, 반대는 16% 포인트가 줄었다. 1년 사이 한일 관계가 악화됐는데도 정상회담 지지 의견은 더 늘었다. 광복 70주년,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한일 관계를 풀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그림 12] 한일정상회담이 필요한가 (단위: %)



한일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선 20대가 77.3%로 지지가 가장 높았다. 20대는 58.6%가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계속되더라도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이 지속돼도 필요하다’는 답도 61.8%였다.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지지다.

일본이 계속 과거사 도발을 해도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60세 이상은 부정적이다. 지지가 가장 낮은(44.8%) 연령대다. ‘독도 영유권 주장이 지속돼도 정상회담이 필요한지에 대한 지지도 60세 이상(45.9%)이 가장 낮다. 일제강점기와 한일 수교 이전 시대를 경험한 이 연령대는 양국 관계 개선에 크게 동의하지만 그래도 역사 문제에 어느 선 이상 양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12년 아베 총리가 재집권하고 한일 관계가 악화된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이 올바른 역사 인식부터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은 이런 입장을 아랑곳 하지 않고 도발을 이어가며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을 유발한다. 국민의 바람과 달리 한일 관계 개선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3)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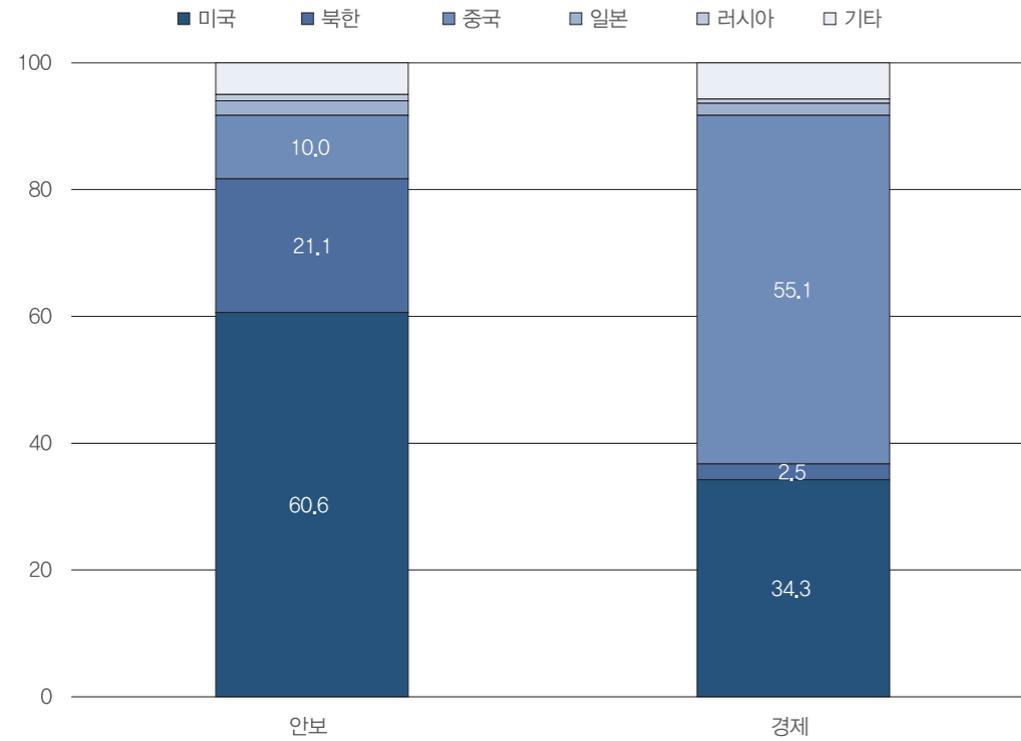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선택은 분명했다. 가장 중요한 나라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꼽았다. ‘안미경중(安美經中)’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AIIB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반영돼 있다. 응답자의 60.6%가 “안보 문제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북한(21.1%), 중국(10%), 일본(2.3%)이 뒤를 이었다.

안보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미국이 안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은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66.1%, 50대가 64%로 나타났다. 30대가 51.9%로 가장 낮았다. 20대는 57%였다. 안보 문제에서 젊은층의 보수화가 재확인됐다.

경제에서는 중국(55.1%)이 가장 중요한 나라로 꼽혔고 미국(34.3%)이 두 번째였다. 일본(1.9%)은 북한(2.5%)보다도 낮은 4위였다.

20대는 거꾸로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중국보다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55.2%였고 40.4%가 중국을 꼽았다. 전 연령대 중 20대에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한

[그림 13] 한국에 가장 중요한 나라는 어디인가(단위: %)



비율이 가장 낮았다. 미국 호감도는 높고 중국 호감도는 낮은 20대의 성향을 보여준다.

40~50대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나라로 중국을 미국보다 훨씬 많이 꼽았다(40대는 중국 67.2%, 미국 23.2%; 50대 중국 65.9%, 미국 25.6%). 40~50대가 경제 상황에 가장 민감한 연령대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부문에서 북한의 중요도는 거의 의미가 없는 2.5% 수준이다. 그러나 안보에서의 중요도는 미국(60.6%) 다음인 21.1%나 돼 '도움은 안되면서 현안은 많은 나라'라는 점이 재확인 됐다.

ASAN
REPORT

한국 외교안보의 8대 과제 박근혜 정부 2년의 성취와 숙제

발행일 2015년 5월

지은이 아산정책연구원

펴낸곳 아산정책연구원

주소 (110-062)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등록 2010년 9월 27일 제 300-2010-122호

전화 02-730-5842

팩스 02-730-5876

이메일 info@asaninst.org

홈페이지 www.asaninst.org

편집 디자인 EGISHOLDINGS

표지 사진 뉴스뱅크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ISBN 979-11-5570-108-9 93300 비매품



9 791155 701089 93300
비매품
ISBN 979-11-5570-108-9